

다산포럼



이한주  
경기연구원 원장

작년 연말 소식이 올라 온 이래, 12월 14일 현재 코로나는 확진자 7200만 여명, 사망자는 160만 명을 넘어가고 있다. 지역적으로 남·북반구를 가리지 않고 있으며 선후진국을 가리지 않고 있으나, 그야말로 팬데믹이라 부를 만한 재앙인 셈이다.

이러한 위기의 원인을 놓고 중국발이나 아니냐는 문제는 아직도 논쟁 중이다. 하지만 중국 우한에서 처음으로 확산 기록되었다고 쳐도 기실 초기 발견이 늦어졌을 가능성이 염두에 둔다면 별 의미 없는 논쟁이다. 다만 코로나19가 본디 박쥐 등 야생동물의 고유한 질병이던 것이 가족을 매개로 사람에게 전파된 것이라면, 그 근본적 원인은 무분별하고 조급한 개발로 동물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그것도 모자라 야생동물에 대한 밀렵과 불법 거래를 한 현재의 인간 문명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생태계를 파괴하였고, 산업화라는 이름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였으며, 그 결과 바이러스가 변형되고 인간에게 노출되는 ‘악의 고리’가 만들어졌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뉴노멀

지난 1백 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격히 늘어난 결과 지구의 표면온도가 1.02도 올랐으며, 북극해의 얼음이 반 이하로 줄고, 해수면이 19cm 상승했다. 그 결과 동물의 20%, 식물의 70%가 멸종위기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이것은 코로나 방역의 촌각에서 터져 나온 반성이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파리 기후협약의 재가입을 제 일선으로 전하고, 한국의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NetZero)을 선언한 배경이리라.

그런가 하면 코로나19는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복합적인 위기를 초래하였다. 우리는 이미 지난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겪었다. 금융 부문에서 시작된 ‘돈맥경화’가 생산과 유통 등 실물로 옮겨붙으며 경제 사회가 온통 엉망이 되었다. 그래도 당시엔 다행히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고, 그나마 수출은 살아 있어서 반등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이번의 위기는 일종의 ‘사회적 동결’이다. 코로나 공포로 이동이 제한되면서 생산·유통·소비·금융·수출 등 전 부문이 정지된 것이다. 마치 극한의 추위가 온 것처럼. 그 결과 그동안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오프쇼어링 했던 기업의 공급 체인에 문제가 생겼다. 원료와 소재-부품-반제품-제품으로 이어지는 라인에 적기 공급과 적시 생산의 확실성이 사라진 것이다. 포춘지는 1000대 기업 중 938개 기업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고한다.

아마도 이러한 변화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시작된 중국(일대일로)과 미국(인도-태평양블록)의 경제 패권 전쟁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특히 지난 11월 15

일 최종 타결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으로 중국의 아시아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세계의 경제 질서를 뒤엎을 것이다. 아울러 이번 코로나 19 대응 과정에서 미국은 국내 방역조차 서투를 정도로 무능했고, 중국은 자국 중심의 폐쇄적 국수적 대응에 머물렀으며, 유럽 또한 통합이 가지는 이점을 전혀 발휘하지 못했다. 이들의 국제정치적 영향력을 대체할 만한 뚜렷한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지만, 동시에 이들의 영향력도 의심받는 상황이 될 것은 분명하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위기는 매우 복합적이다. 일국을 넘어서 국제적으로 확산되었다. 더욱이 위기는 만성화되고 있다. 지난봄 방역에 성공하지 못했던 나라는 물론 확산 저지에 성공했던 대부분의 나라도 3차 유행에 직면했다. K-방역으로 세계적인 칭송을 받았던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확진자가 연일 6백 명을 넘나들다가 최근 1000여 명을 넘어섰다.

이것은 백신이 성공적으로 보급될 때에야 비로소 일단락될 것이다. 다행히 화이자·아스트로제네카·모더나 등에서 제한적이거나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우리 정부도 2021년까지 인구의 85%에 대한 접종 계획을 세웠다고 하니 참으로 다행이다. 그러나 백신의 효과와 안전에 대해 안심은 아직 이르다. 백신이 성공할 해도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는 세상의 기온이 변할 것이다. 반드시 미리미리 대응해야만 하며, 그 점에서 이번 2050 탄소중립(NetZero) 선언은 새 시대의 입구가 될 것이다.

NGO칼럼

‘탄소 중립 선언’ 광주, 진월저수지 매립할 것인가



박경희  
광주전남녹색연합  
습지보전위원장

얼마 전 광주시의회에서 실시한 그린 뉴딜을 위한 시민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광주시민 80%가 기후 위기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 실천에 참여할 의사가 충분함을 확인할 수 있다.

기후 위기는 탄소 배출을 줄여 지구 온도가 1.5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사회 전반의 대전환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산업의 전환, 우리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 더불어 탄소 저감을 위한 도시 녹지 공간의 확보와 보전 역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방향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장죽습지의 국가 습지 보호 지역 지정은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탄소 흡수원으로 도시 습지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보전과 복원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시점에 광주시 남구 진월저수지를 매립하여 축구장과 야구장, 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하니 이런 결정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의아하고 황당할 뿐이다. 진월저수지는 2009년 그 일대 18만여㎡를 데니스장·골프연습장 등 체육공간과 자연 체험 학습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 아래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되었다. 당시 진월저수지 부지는 환경 평가 등급 ‘1등급’ 보전을 전제로 해제되었다. 따라서 개발 제한 구역 해제 조건이 ‘진월저수지 보전’이었음을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남구청은 진월저수지 인접지에 조성할 축구장 계획을 저수지 일부를 매립하여 축구장·야구장·풋살장·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바꾸려 하고 있다. 당초 매립 부지가 보수가 높아지면서 매립이 어려워지고 예정 부지 건너편 아파트 주민들이 조맹과 소음을 이유로 반대를 하면서 진월저수지를 매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다. 남구는 입지 변경 결정을 위해 오는 17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2011년 광주시가 친환경적인 도시 계획과 자연 환경 보전에 활용하기 위해 실시한 광주시 비오톱 조사 결과를 보면 진월저수지는 1등급인 절대 보전 등급으로 평가되었다. 보고서에서는 진월저수지의 습지 생태계가 뛰어나 가치가 높다고 평가하며 생태 환경에 대한 보호가 시급하며 생태 경관 보전 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런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진월저수지를 방치해왔던 행정이, 우수한 습지를 보전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행정이, 오히려 무단 쓰레기 투기로 인한 민원 발생을 이유로 저수지를 매립하겠다고 한다. 관리를 하지 못한 책임을 매립이라는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후안무치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부끄러움은 왜 시민의 몫이 되어야 하

는가.

기후 위기 시대, 한국은 2050년 탄소 중립 사회를 선언하였다. 광주는 이보다도 빠른 2045년 탄소 중립에 나서 자립 도시를 선언하였다. 이제 에너지 전환, 산업 전환, 먹거리, 교통과 수송 등 모든 정책이 탄소 중립을 목표로 설정되고 추진될 것이다. 환경과 녹지 정책 또한 마찬가지이다.

도시 습지는 도시에서 탄소 흡수원으로, 생물 다양성을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공간으로, 도시 기후를 조절해주는 기능으로 우리의 삶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높다. 2045 탄소 중립 광주를 위해 도시 습지를 보전하고 복원해야 하는 이유이다.

광주시의 저수지는 1990년에 162개소, 2002년에 150개소, 2012년 140개소, 올해는 137개소로 줄어들었다. 30년 동안 25개소의 저수지가 사라졌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개발 사업이 이유로 도심에 있는 습지나 저수지가 매립될 위기에 처해 있다.

1970년대 도시가 팽창하면서 하천에 쓰레기가 쌓이고 악취가 나서 대부분의 하천이 복개되었다. 하천의 복개도 도시의 물 순환이 왜곡되고 하천의 건천화, 도시 홍수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제는 이 복개된 하천을 생태 하천으로 복원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시대에 저수지에 쓰레기를 투기하고 악취가 나니 매립해서 축구장을 만들고 주차장을 만들자고 하는 행정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인가?

2021년을 앞둔 지금, 2045 탄소 중립을 선언한 도시 광주에게 묻는다. 진월저수지를 매립할 것인가?

기고

수입 쌀 소비처 제대로 알고 먹어야



정석운  
농협 구미교육원 교수

수입 쌀의 주된 소비처는 어디일까? 우리는 자유 무역 협정(FTA)으로 많은 양의 쌀이 수입된다고는 익히 듣고 있지만 어디에서 소비되고 우리들이 먹고 있는지는 실상 모르고 있다. 그러는 사이 밥쌀용 수입 쌀의 주된 소비처는 점차 넓어지고 있다. 최근 쌀값 상승에 따라 국내산보다 20~30% 저렴하기 때문에 단가에 민감한 대량 급식업소나 코로나 19로 경영 압박을 받고 있는 영세 식당들이 수입 쌀을 찾은 것이다. 하지만 시중에서 수입 쌀을 쓴다고 밝히는 식당이나 그 원재료 사용 판매처(수입 쌀 교자)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농식품부의 자료 ‘밥쌀용 수입 쌀 원산지 위반 내역’에 따르면 2006~2015년 수입 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적발된 업소가 무려 1412 곳에 이른다(2015년 기준). 초기 5년(2006~2010년)은 131건(9.3%)에 불과했지만, 이후 5년(2011~2015년)은 1281건(90.7%)에 달했고 이런 차이는 2011년 2월부터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대상이 100㎡(30.25평) 이하 모든 식당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런 사유로 현장 농업계에서는 수입 쌀의 둔갑 판매를 막으려면 수입 쌀의 재포장을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밥쌀용 수입 쌀은 현지에서 흰쌀로 도정된 뒤 10kg과 20kg들이 종이 포대에 담겨 국내로 들어 오고 있는데 신선도나 비용 등을 따져 봐도 굳이 재포장할 이유가 없다. 과거 19대 국회에서 재포장 금지 법안이 발의됐지만, 어차구니 없게도 관련 업계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우리 쌀은 수입 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우수하다. 국민 모두가 대부분 그리 알고 있고 실제 품질 경쟁력은 높다고 할 수 있다. 우리와 가깝고도 먼 이웃인 일본은 오래 전부터 이런 폐해(쌀 원산지 위반)를 막기 위해 고품질 브랜드화 시책을 추진해 다진 품질 경쟁력으로 중국의 고급 소비자 시장까지 진출했다. 미국과 태국 쌀은 그나마 외관상 모양이 우리 쌀과 쉽게 구분되지만, 중국 쌀은 우리 쌀과 외형이 비슷해 국산으로 둔갑될 개연성이 가장 높다.

원산지 위반은 육안으로는 우리 쌀과 구별이 어렵고, 상당한 부당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비양심적인 유통업체 종사자에 의한 원산지 둔갑 행위는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단순한으로는 부정 유통을 막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보완되어야 한다.

첫째, 수입 때 절대 재포장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수입 쌀의 일부를 우리 쌀과 혼합하거나 또는 단순히 포장재를 우리 것으로, 바꾸는 재포장 과정에서 원

산지가 둔갑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재포장을 허용하지 않으면, 원산지 둔갑은 당연히 줄 수밖에 없다.

둘째, 식당에서 사용하는 쌀의 원산지 표시 위반 과태료를 증액해야 한다. 낮은 과태료는 임시방편의 효과는 있을지언정, 원천 봉쇄하기란 불가능하다. 가격이 낮은 수입 쌀이 국산으로 둔갑돼 시중에 유통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또한 국산 쌀값의 도미노적인 하락을 부추겨 우리 농업의 생산 기반을 붕괴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셋째, 벼 품종 판별 기술(현재 99% 판별 가능)을 더욱 정밀화하여 수입 쌀이 혼합되거나 국산 쌀로 둔갑되는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우리 쌀 시장을 보호하여야 한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중국도 작황 불량 식품(가짜 쇠고기,가짜 계란,가짜 호두 등)의 빈번한 발생으로 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요즘을 우리 식단에서 우리 쌀을 지켜내는 것은 큰 과제일 것이다.

과일·육류와 다르게 쌀은 그동안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먹거리였기에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조금만 관심을 갖고 살펴보면 주식(主食) 그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음을 쉽게 알게 된다. 대한민국 100년을 준비하는 2021년 신축년을 우리 쌀의 주권 확보를 위한 원년으로 삼고 국민적 관심 제고와 재배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社說

조류독감 조기 차단으로 농가 피해 줄여야

전남도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조류독감) 확산세가 매섭다. 이동 중지 명령에도 지난 4일 첫 발생 이후 열흘 새 여섯 개 농장에서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살처분된 닭·오리가 160만 마리를 넘어섰다. 국내 최대 오리 사육지인 전남 지역이 속수무책으로 뚫리고 있는 것이다.

전남도는 그제 ‘영암군 덕진면 육용 오리 농장 두 곳에서 채취한 시료를 정밀 검사한 결과 H5N8형 고병원성 AI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영암 시중, 7일 나주 세지, 9일 나주 동강, 10일 장성 삼계에 이어 두 곳이 추가되면서 확진 농장은 여섯 곳으로 늘었다. 이는 전국 발생 농장 12개 중 절반에 해당한다. 특히 육용 오리 농장은 물론 중요 오리 농장과 도축장까지 검사를 수 없이 번지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농가들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고병원성 AI가 확진되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반경 3km 내 가금류를 모두 살처분하는데, 그 대상이 162만 300마리까지 늘어났다. 도내 오리 사

육 규모가 402만 마리인 점을 고려하면 키우던 오리의 40% 이상이 열흘 만에 사라진 셈이다.

조류독감은 확산 속도가 빨라 초기 대응에 실패할 경우 피해 규모가 급격히 늘어난다. 이번에도 첫 확진 이후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의심 사례들이 어김없이 고병원성 AI로 이어지는 위중한 상황이다. 특히 올해 조류독감은 과거와는 다르게 무증상인 경우가 많아 검사를 받기 전에는 농장에서 감염 사실조차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감염 농장 간 연결고리도 뚜렷하지 않다고 한다.

결국 최선의 대책은 촘촘한 방역뿐이다. 방역 당국은 가금 농장과 관련 시설 및 철새 도래지에 대한 전방위적 점검과 소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농가에서도 자신의 농장 밖은 아예 오엽돼 있다고 생각하고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주민들 역시 발생 지역 방문을 자제하는 등 AI 조기 차단으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빛원전 정비·운영 잇단 부실 의혹 규명

한빛원전의 정비·점검과 운영 부실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지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원전 운영을 맡은 한수원의 미온적 대응도 지역민 불안감 증폭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빛원전 5호기는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실시된 ‘제 13차 계획 예방정비’ 과정에서 시공 불량·부실 관리 의혹 등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일부 부실 자재 사용, 무자격 용접업자 투입, 공인 검사기관이 아닌 개인 검사원에게 맡긴 하도급 검사, 주민과의 약속인 원전 정비 과정 영상 촬영 목적 등 갖가지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여기에 관통관에서 균열이, 격납건물에서 커다란 공극이 발견되는가 하면 증기발생기 운영 과정의 미흡함도 드러나 발전을 재개한 지 며칠 만에 다시 가동을 멈추는 부실 운영의 문제점도 드러난 바 있다. 그러나 책임을 져야 할 한빛원전 측

은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해 투명하게 공개하기는커녕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수사 의뢰와 미온적 해명으로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다.

또한 한수원은 애초 계획 예방정비를 끝낸 뒤 ‘이상 없다’며 가동까지 했다가 뒤늦게 원안위 조사를 통해 부실한 정비 여부를 확인했다. 원안위 조사 결과에서는 한수원 발표와 달리 규격과 다른 재질로 용접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뒤늦게 확인된 부실 정비·관리 실태와 관련,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수사 당국은 애초 원전 시공을 맡은 두 산중공업의 검증보고서 조작 및 은폐 의혹뿐만 아니라 한수원·원자력안전기술원·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각각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재가동을 성급하게 추진하다가 의도적으로 부실시공 여부를 묵인하지 않았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겨울에 맞춰 꽃을 피우는 나무들이 있다. 김훈 작가는 ‘꽃은 바로 식물의 생식기’라고 했다. 꽃이 피는 것은 2세를 남기기 위해 씨앗을 맺는 필수 과정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수정을 도와줄 벌이 없는 데다 생장도 어려운 겨울은 종족 보존에 매우 불리한 계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식물은 굳이 늦가을이나 초겨울에 개화한다. 수만 년에 달하는 장구한 식물의 진화 과정에서 그런 뜻밖의 선택을 한 이유가 분명 있을 것이다.

동백나무도 겨울에 피는 꽃인데, 동백과 닮은 꽃인 산다화(山荊花)가 요즘 눈길을 끈다. 꽃이 동백보다 작아 ‘애기동백’이라고도 불린다. 얼마 전 보성군 득량면 오봉리 초암마을에 자리한 초암정원에서 산다화를 만났다. 청암(靑巖) 김재기(82) 어르신은 60여 년간 가꾸 온 이곳은 지난 2017년 전남도 제3호 민간정원으로 지정됐다. 입구에 들어서면 붉은 꽃을 피운 산다화가 먼저 방문객을 반긴다.

고택 마당을 지나 안쪽으로 들어가면 좀 더 다채로운 수심 그루의 산다화를 만날 수 있다. 붉고 하얗고, 나무마다 꽃 색

가운데, 모두 6종이다. 한쪽에서는 꽃들이 만개했는데 다른 쪽에는 꽃망울이 맺혀 있다. 나무 아래는 떨어진 꽃잎들이 붉은 융단을 이루고 있다. 잔디밭에 앉아 내려다보는 산다화 꽃 풍경은 득량만 바다 빛깔과 잘 어울려 ‘코로나 블루’ 따위는 일시에 날려 버리는 듯하다.

신안군 압해읍 송곡리 ‘천사봉 분재 공원’ 역시 애기동백으로 유명하다. 이곳 분재공원 내 5ha의 부지에는 1만 7000여 그루의 애기동백 나무가 식재돼 있다. 신안군은 매년 이곳에서 개화에 맞춰 축제를 개최해 왔지만, 올해는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섬겨꽃 랜선 축제’로 대체했다고 한다. 홈페이지(섬겨꽃애기동백축제.com)를 통해 내 오는 날 애기동백 숲길 풍경 사진과 동백을 테마로 한 회화전, 지난해 유튜브 공모전 수상작 등을 감상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애기동백 꽃은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 주는 듯하다. 눈 오는 날에도 꽃 피우는 자신처럼 견디라고, 이겨 내라고... 겨울 꽃을 다시금 보며 명상에 젖는다.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崔宰豪</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에ditor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